

한국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曹 喜 澈 (국회의원 · 평민당)

이 글은 지난 6월 2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에너지협의회 주관 제3회 에너지 경영인 조찬회에서 曹喜澈의원(平民)이 행한 주제발표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註>

1. 머리말

친애하는 한국에너지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에 계시는 여러분!

오늘 한국에너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에너지경영인 간담회에 초청되어 여러분들과 에너지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크나 큰 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에너지 사정을 살펴보면 이땅에서 뒤늦게 일기 시작한 反核, 反原電 운동에 의하여 電源개발과 핵폐기물 관리상의 난관이 예상되고 있고, 석탄산업합리화 대책에 따른 폐광조치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반적인 국가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속에서도 에너지에 관한 지식, 기술 및 정보를 보급, 발전시키고 에너지 관련 국내의 협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복지증진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각분야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

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부 또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국정을 담당하는 한 의원으로서 각론적인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국내의 에너지 환경과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정치, 사회적으로 에너지정책에 있어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미래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국회 動資위원이 된지, 이제 1년여에 불과하여 에너지에 대해서는 겨우 走馬看山格인 식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에 이미 20년, 30년간 종사하고 이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께 에너지문제에 대한 청언을 요청 받았을 때 매우 망서렸습니다만, 그간 제가 느꼈던 점이나 말씀드릴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발전에 미력이거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다소 부족하거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점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솔직하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研究 노력하여 본의원의 의정할

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천연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석유자원은 100%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쓰고 있으며 (소맥이나 옥수수같은 농산물 자원도 美國이나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철광석 같은 기초공업원료도 대부분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에너지는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방문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19세기 산업혁명에 석탄에너지가 그 원동력이 되었고, 20세기 현대문명은 石油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문명의 역사는 바로 에너지 이용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는 인류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세계 열강들의 패권다툼은 바로 에너지의 쟁탈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바로 그 에너지의 확보와 이용능력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났으며, 평화시에도 에너지자원의 안전한 확보와 이용 여하에 의하여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구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日帝시대를 거쳐 해방이후 50년대와 6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에서는 값싸고 편리한 석유와 가스가 국민생활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신탄등 불편한 에너지에 의존하고 만성적인 에너지 기근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초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원의 개발확보 정책이 추진되어 에너지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70년대의 두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중대성을 새삼 깨닫고 勳資部의 발족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에너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있어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에너지정책의 부재로 그때 그때의 국내환경이나, 국제정세에 따라 근시안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에 급급하여, 국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에너지정책이 능률만능주의에 밀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권위주의적이고 密室행정 이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이 여태껏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과 현재의 민주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 자각이 이루어져 과거의 에너지정책과 에너지행정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60년대 主炭後油나 主油後炭등의 근시안적 시야에서 잦은 정책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공업화추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석유, 석탄, 전력등의 에너지 확보와 공급에만 주력함으로써 에너지 多消費産業 중심의 산업구조와 過消費 현상을 빚었습니다. 특히 70년대의 과도한 중화학 투자정책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때 국민경제 발전에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으며, 또한 에너지 절약등 합리적인 수요관리와 에너지원간 조화 있는 장기종합대책의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과거 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선진석유수입국은 다같이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하는 등 소위 안정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日本이나 西獨등과 같은 몇몇 나라들은 에너지 사용이 적은 산업부분으로의 투자유도 정책을 중점적으로 推進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가면서 감량경제를 운용한 결과 무난히 석유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경제개발에 있어 고도 성장에만 정책역점을 둬으로써 수출확대와 中東 景氣의 특수성으로 1차 위기는 잘 넘겼다고 하나 돌이켜보면, 산업정책 전반에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중공업 투자정책을 무리하게 계속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에의 과도한 투자로 국제수지의 엄청난 적자는 물론 만성적인 인플레로 80년대초에 최악의 경제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행정측면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 소홀했던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제1차 석유파동의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의 환상에 안주하여 과도한 석유의존형의 수급정책으로 인해 제2차 석유파동에 급박한 에너지환경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더욱이 우리나라는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석유등 비상시에 쓸 에너지 비축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능률적이고 획일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만 집착하여 그때 그때의 필요한 에너지만 공급하면 된다 하는 식의 행정 만의 풍토등으로, 에너지절약 및 기술개발을 지속하면서 국민생활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장기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장기종합대책의 추진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날 密室政治에 의해 저질러져 아직까지도 국민의 대다수가 완전히 납득이 가지않는 석유사업 기금의 운용 문제, 인도네시아産 가스 도입과정의 의혹, 그리고 原電도입에 따른 의혹과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석유사업기금의 정치자금화에 대한 의혹은 현재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인도네시아간에 전격적으로 체결된 인도네시아 가스도입 배경과 그후 계약의 수정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오면서 단 한번도 국민들에게 입찰과정과 낙찰가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原電의 안정성, 경제성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은 蘇聯에서의 체르노빌 참사소식과 함께 이땅에 反原電운동을 불러 일으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등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무정전한 에너지정책과 무책임한 에너지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됨이 없이 미봉책으로 얼버무린 결과 석탄산업의 퇴조에 의한 사회적 문제, 유가하락에 따른 유통소비 급증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정책의 이완, 反原電운동으로 인한 발전소 부지와 핵폐기물 저장소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LNG 사업초기의 단점으로 인한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자간의 부조화로 의면받는 국민의 편익, 그리고 마침내는 행정개혁 위원의 무지와 인식 부족으로 인한 동자부 폐지론이 나오게 되는 등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미래의 에너지정책 방향

에너지문제는 한 두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문제는 보통 연구를 본격화한 때부터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걸려야 실용화 단계로 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문제는 행정부나 기업가 등의 어느 한편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과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지역여건 이용구조의 복잡성등의 특성을 감안해 균형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의 장기성과 규모가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대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조화있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 부응하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과거의 독점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정책을 완화하고 자율적이며 경쟁적인 체제로 유도하고 발전시켜, 지역경제는 물론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국민생활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는 정책을 집행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이용에 따른 안전 및 환경문제와 미래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전국민적인 신뢰기반을 조성하도록 에너지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장래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확고하고도 뚜렷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웃 日本의 경우 'Cheapness, Stableness, Independence'라는 세가지 원칙 위에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오늘날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칙의 부재로 에너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갈팡질팡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앞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관성있고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고 생각하면서 미래의 에너지정책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가. 에너지 기술혁신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가장 풍부하고 중요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술혁신」을 이룩하여 기술 집약적 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래 에너지 부국의 기준은 유한한 자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선진 고급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반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인 에너지원의 보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만이 에너지부국을 이루는 첩경이라고 본의원은 믿으며, 이것을 위해서 동자부 산하 연구기관이나 기금출연 연구소를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체제로 바꾸고 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에너지 관련 연구원이나 연구소의 체계를 새로운 에너지기술인 고속증식로나 차세대형 원자로기술, 상온 핵융합 반응기술, 초전도기술, 원자력발전소건설의 국산화 기술등과 같은 고도의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체질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범 세계적 공동 협력강화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환경문제와 결부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뿐인 지구를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구의 온실효과와 산성비를 고려한 에너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세계각국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다룰 것이 분명하니 만큼, 각 나라마다 국가 특성에 맞는 국가 단위의 범 세계적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세계가 공동으로 미래의 에너지위기에 문제에 대처하면서 지구의 생존이 걸린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 각국의 환경조사에 의한 환경 오염정도와 부존에너지자원, 그리고 인력자원 정도에 따라 각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중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또는 몇몇 나라가 합심하여 에너지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세계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의 에너지포화

건설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앞으로 개최될 WEC(세계에너지회의)나 각종 에너지관련 국제회의에서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 에너지 정보망 구축

앞으로의 세계는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에너지관련 분야의 국내정보는 물론 국제정보의 신속한 수집, 분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 수집한 정보의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선진국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 중동정세, 국제석유시장의 동태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물량확보 및 가격변동등에 단기적 대응책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 추진

地自制 실시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제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에너지정책을 실시하여 대체에너지개발 정책과 에너지다원화 정책을 병행해 나가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가령, 넓게는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등 다섯 지역으로 나누고 좁게는 道單位로 나누는등 지리적, 경제적, 군사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소 건설과 대체에너지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지금까지의 지역사회와의 불편한점을 해소하고 유대를 강화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 하겠습니까.

마. 原電의 안전 확보와 反原電운동에의 효율적 대응

原電의 안전과 反核·反原電운동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도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의 추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탈석유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집약적이고 경제성이 뛰어나면서도 반영구적인 原子力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에 대한 공포와 원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反核·反原電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原電 반대운동으로 原子力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原子力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지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강구되면서, 동시에 사고발생시의 대책수립에 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原電 반대운동을 단지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原子力사업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을 재고시키라는 비판적 충고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原電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설득, 홍보활동과 原電 주변지역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만이 原電의 안전문제와 原電 부지문제 그리고 핵폐기물저장소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原子力事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핵폐기물 재처리와 그에 관련된 기술문제 및 외교문제등에 대한 신속성있는 대응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까.

바. 에너지정책의 민주화 촉진

그리고 이밖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석유사업 기금의 효율적 이용, 무연탄 수요감소와 심부화에 따른 석탄산업합리화대책, LNG 사업의 공익성 증대를 위한 대책과 장기적 안목에서의 LNG 도입선 다변화 모색, 에너지절약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민주화 시대이므로 당연히 모든 정책에 이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행정기관이나 관련 산하단체의 조직들이 과거의 권위주의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이 시대의 정신인 민주정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만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위상을 확립해 주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지킬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전한 정신만이 건전한 사고를 낳는다'는 격언을 명심하고서 건전한 민주정신을 반영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국회와 정부의 상호협조

민주화시대에 맞는 에너지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의 긴밀한 대화와 국회의 비판적 조언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처럼 정부의 계획 수립후 단지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 방식을 지양하고 국회가 당리당락의 차원을 넘어서 국회의 역할 즉 국민 각계각층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의 복지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4. 맺는말

우리는 지금 과거 독단적이고 非理가 자행되던 시대로부터 이제 전국민이 합심하여 민주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여러가지 수많은 욕구의 분출과 의견의 수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처럼 우리 에너지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이 결론적으로 말할 요지는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일관된 정책운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장기적인 안목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풍부하고 뛰어난 인력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기술혁신」을 이룩함으로써 미래의 에너지피어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행정당국이나 산업계는 물론 우리 국회도 초당적으로 합심하여 WEC(세계에너지회의)의 「인류의 최대편익을 위한 에너지자원의 개발추진과 평화적 이용」에 기여하는 힘찬 대열에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주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